

전주 특례시 지정 힘 보태

완산구, '속 깊은 복지행정' 등 새해 5대 추진목표 제시

전주시 완산구청은 전주시의 역점시책인 '전주특례시' 지정을 전주시의 중심지역으로서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2019년 완산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완산구는 전주의 중심 지역으로 올해 마무리되는 전라감영1단계 복원, 동학농민혁명 녹두관 완공, 풍매지관 복원, 전주부성 일부 복원, 천만관광 도시 한옥마을의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해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밑거름이 될 각오를 밝혔다.

최라기 완산구청장은 30일 열린 완산구청 신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구정 운영 5대 기본방향 15개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도시 완산을 슬로건으로 한 5대 업무추진목표는 △함께 나누고 당당하게 누리는 '속 깊은 복지행정' △시민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사업과 생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린행정' △내일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행정' △알짜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함께 잘사는 '희망행정'이다.

먼저, 함께 나누고 당당하게 누리는 속 깊은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급여 지원하고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로 맞춤형 복지 실현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밀착 행정 강화 △기본에 충실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

원처리 △민원실, 청사 등의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문화가 숨 쉬는 행복청사 조성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범 기업공인중개사 지정제 운영 △간편한 신고로 창업 및 소득 창출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홍보하는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람과 생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린행정 구현을 목표로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구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공원을 숲처럼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도시 숲공원 조성 △계절감이 있는 완충녹지 조성 △도로변 가로수 전지 및 잡초 제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고 명품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반달밭이 서식지 유지관리 △하천 시설물 적기보수 및 상시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투기 상습지역 일제조사 및 감시카메라 확충 △노점허용구역 자율질서대를 운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구축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 운영 △객리단길, 한옥마을 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 및 홍보 등 기초질서 준수 및 의식개선 활동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동시에, 올해 시민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보안등 신설(580개) △노후교량 안전점검(21개소) 및 보수보강(5개소) △도로 인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12개소) △재난재해 사각지역 예방 활동 강화 △노후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및 안전관리 △주택가 재해위험수목 정비 △취약지역 시설물 예방적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중위생업소(1,516개소) 서비스 평가 △식품제조가공업소(62개소) 위생등급평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음식점·숙박업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정착에 힘쓰게 된다.

끝으로, 완산구는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활성화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알짜'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함께 잘사는 희망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이용의 날 추진 △명절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운동 △지역생산물 우선 구매 운동 △소규모 공장 설립 및 각종 판매업 신고절차 신속화 △지역공동체 일자리(36명) △공공근로사업(8개 사업 96명) △노인일자리사업(950명) △경력단절여성 직업능력개발교육 지원 등의 사업이 전개된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라기 완산구청장은 "도심 쓰레기,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등 고질적인 시민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작지만 가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세심하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작은 변화를 체감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탄탄한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효철 기자



가정집 화재 진압 30일 오후 1시56분경 전주시 인후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해당 주택에 있던 A모씨(90·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는 2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탄소 상용화 이끌 차량적용기술개발 공동 추진

전주시, 기아자동차·탄소융합기술원과 오늘 협약 체결기로

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아자동차가 최근 구축한 첨단 장비와 미래먹거리인 탄소복합재를 활용, 자동차 부품에 상용화 하기 위한 신기술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이들 3개 기관은 31일 기술원 상용화기술센터에서 탄소복합재를 저비용·고속생산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자동차에 적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개발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탄소산업 일반자인 전주가 탄소소재 기술 개발에 이어 탄소복합재 부품개발과 상용화로 전주시의 자동차산업도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기아자동차는 기술원의 상용화 기술센터 3층에 '기아 복합소재테크센터'를 개소하고 기술원과 공동으로 첨단장비를 활용, 올해부터

자동차 부품 적용분야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기술원 상용화기술센터에 구축된 '고속 자가 히팅 3D 진공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탄소복합재를 고속으로 성형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자동차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고강도 탄소복합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프리폼(예비성형체)과 탄소복합체의 대량제조가 가능하며 전자부품 및 일반산업용 탄소복합재 부품에도 적용할 수 있어 탄소상용화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후드(본넷) 등과 같은 대형부품(1.5X1m)까지 제조가 가능해진다.

방운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조만간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술원에 구축된 연구개발 인

프라를 중심으로 기아자동차와 같은 대기업과 산단 입주예정기업을 연계해 전주시가 대한민국의 탄소산업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매장 상습 절도 40대 입건

상습적으로 매장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30일 절도 혐의로 A모씨(4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고사동 인근 매장 8곳에서 총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손님이 가장해 들어가 구두를 신은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빠져나오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2시경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설 명절 문 여는 병원·약국 확인'

전주시보건소, 내달 2일부터 5일간 운영

당직 의료기관·휴일지킴이 약국 796개소 지정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등 총 799개소를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 중 문을 여는 가까운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2월 1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제공하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또,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onju.go.kr),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인구가동 및

해외여행객 증가에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키로 했다.

설 연휴 기간 홍역과 메르스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의료기관을 무조건 방문하기보다는 즉시 보건소(281-6200) 또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1339)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경수 전주시보건소장은 "건강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해 장시간 기다리거나 불만은 집 근처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찾는 것이 좋다"며, "설 명절기간 시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1심서 실형

'드루킹' 김동원 일당 댓글조작 관련 징역 2년 선고받아

김 지사 "진실 외면 결정 납득할 수 없어... 끝까지 싸울 것"

'드루킹' 김동원씨(50)와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을 지시하고 일당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와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컴퓨터등장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행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회를위한모임(경공모) 산체에 방문해 '김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 김씨 등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김 지사에

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 '김크랩'을 이용해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했다"며 "김씨는 또 모 번호사(62)를 일본 샌다이 총영사직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하고 이러한 활동을 이어 나갔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입무방해와 위계·의탁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는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드루킹' 김동원 1심서 3년 6개월 선고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씨 일당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다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업무 등의 혐

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상습상해' 조재범, 항소심서 1년 6개월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4부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며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 등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에 진행하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지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심 선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피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특별단속반 운영

전주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 활동에 나섰다.

시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의 환경관계부서 직원으로 3개반 6명의 환경감시반을 편성, 지난 28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공업단지외 하천 오염우려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사전 홍보 계도 및 특별점검 △상황실 운영 및 공장밀집지역 순찰강화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 등 총 3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설 연휴기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동절기 한파로 인한 오염물질 방치시설 등과 등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공업단지 인근 하천과 환경오염 위반사업장을 위주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또 한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이번 설 명절 전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장밀집지역 등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점검결과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 △비밀배출구를 통해 처리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매립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유독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거나 신고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및 경고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홍보 기사 실어달라며 돈 건넨

군산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법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실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현직 시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의원(51)에 대한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군산시 한 월간잡지에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실는 대가로 해당 매체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였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헌법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석훈 기자

휴대폰 충전기 패드 훔친 40대 검거

익산경찰서는 30일 절도 혐의로 A모씨(48)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8분경 익산시 B로 한 매장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패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5시 20분경 피의자 주거지 앞에서 A모씨를 검거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법원은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강석훈 기자